【 2015.06.24(수) 강원일보 】

"도내 절반 넘게 해당… 하도급업체 피해 더 늘어날 것"

하도급법 미적용 원사업자 확대 방침에 전문건설업계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원사업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3일 공정위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하도급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원사업자 수를 늘렸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구두 발주 등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연매출 10억~20억원, 시공능력평가 30억원 이하인 업체는 처벌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시공능력평가 60억원 미만 원사업자까지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문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종합건설업체 1만1,974개 중 43.7%에 달하는 5,227개 업체가 하도급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가 불공정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어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의 경우 전체 600여 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365개 업체가 해당된다는 것이 전문건설협회 도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불공정행위가 여전한데 이번 사행령 개정으로 하도급법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분쟁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위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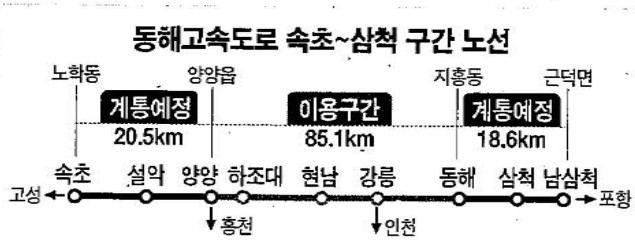
동해고속도 속초구간 내년 9월 개통

【속초】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공사가 내년 9월 추석 이전 개통 예정이어서 낙후된 동해안 발전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은 2009년부터 내년 9월까지 모두 1조2,200억여원을 들여 양양군 양양읍 월리~속초시 노학동 20.5㎞ 구간과 동해시 지흥동~삼척시 근덕면 18.6㎞ 구간의 공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양~속초 구간은 현재 공정률이 81%; 동해~삼척 구간은 85% 수준이며 공사 측은 올해 말까지는 89%까지 마치고 내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 공사가 끝나 도내 동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4차선으로 개통되면 경북, 울산, 부산 등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는 2017년 이후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좋아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속초 20.5㎞ 현재 공정률 81% 공사추진 순조

2017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시 동해안 발전의 전기

한국도로공사는 이 구간 공사가 끝나면 삼척~속초 구간은 운행거리가 130.6㎞에서 124.2㎞로 6.9㎞ 줄어들고 운행 시간도 127분에서 74분으로 53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삼척~강릉도 운행거리가 61.5㎞에서 59.5㎞로 2㎞가량 줄고 운행 시간도 57분에서 36분으로 21분가량 단축된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는 2017년이면 현재 169분가량이 소요되는 서울~인제~속초 노선보다 1시간가량 단축되는 서울~양양~속초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과의 교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극영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장은 "동해고속도로 삼척~속초 구간이 개통되면 동해안 지역 개발 촉진과 관광 사업 활성화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달순기자 dsgo@

【 2015.06.24(수) 건설경제 】

SOC 재정 집행 성적 '저조'

국토부 5월까지 집행률 47.9%
상반기 목표 달성 '적신호'
철도공단·LH 등도 지지부진

올 상반기 SOC(사회기반시설) 재정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재정집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정집행 실적은 3조4636억원으로 전월(4조1362억원) 대비 16.3%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 1월 2조4329억원, 2월 3조1031억원, 3월 5조2994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집행률을 확대했다.

그러나 4월(4조1362억원) 들어 재정집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지난달에는 3조원대로 재정집행 실적이 더욱 축소됐다.

이로써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토부의 재정집행 실적은 18조4352억원으로 연간 계획(38조4731억원) 대비 47.9%의 재정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앙부처 평균 재정집행률(48.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58.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집행률을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공공기관의 SOC 재정 조기집행은 더욱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달 철도시설공단의 재정집행 실적은 1065억원으로 전월(5619억원)보다 무려 81.0% 감소했고 LH도 전월(1조5772억원) 대비 20.1% 줄어든 1조2608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철도시설공단과 LH의 재정집행 실적은 각각 2조7531억원, 6조4462억원으로 재정집행률은 고작 34.5%, 39.7%에 불과하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달 재정집행 실적이 전월보다는 다소 증가했지만 기저효과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전월(2534억원) 대비 23.8% 늘어난 3137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정집행 실적(1조4005억원)이 연간 계획(3조3955억원)의 41.2%에 머무르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수자원공사도 지난달 재정집행 실적이 1028억원으로 전월(576억원)보다 78.5% 급증했지만 재정집행률이 39.8%(7869억원)에 그치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에 나서고 있지만 SOC 분야에선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의 하향조정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적기 투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퇴계·삼천·온의동 일대〉

춘천에 아파트 4500가구 들어선다

외곽지역 규제 완화
주택난 해소 기대

강원 춘천지역에 45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건설될 전망이다. 이는 춘천시가 최근 외곽지역 건설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한 조치 뒤에 처음 나온 것이다.

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퇴계동과 삼천동, 온의동 일대에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한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퇴계동 일대 이안아파트 주변 개발면적은 19만3000㎡로 아파트 21개동 3152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 온의동 일대 럭키아파트 주변은 2만7000㎡에 아파트 12개동 546가구, 삼천동 교차로 주변은 5만5000㎡에 아파트 7개동 899가구가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처럼 3개 지역에 아파트가 추진되면 모두 4500여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춘천시는 옛 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후 주택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외곽지역은 개발규제로 말미암아 입안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춘천지역에 아파트가 부족해 주택난이 가중되자 춘천시는 그동안 묶어두었던 외곽지역 건설 규제를 최근 풀었다.

춘천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개발사업이 통과되면 교통과 환경 영향평가를 비롯해 관련부서 협의,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2~3월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